

# “계엄군 헬기, 27일 새벽 전일빌딩 2분이상 난사”

###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생생한 증언

#### 전일빌딩 옥상·상층부 시민군 다수 배치 헬기 사격한 뒤 공수부대 도청 밀려들어 불꽃 끝없이 일어...두눈으로 똑똑히 확인



박남선씨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쯤 별안간 금남로 상공에 날아든 헬기가 전일빌딩 옥상과 상층부를 난사했다. 총성과 불꽃이 헬기에서 끝없이 튀어나왔다. 그러곤 공수부대가 도청으로 밀려들었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는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실재했다”면서 “내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박씨는 “당시 새벽 3시부터 공수부대가 도청 집안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도청 마당에서 시민군을 재배치하고 있었다”면서 “어느 순간 헬기가 금남로 상공으로 날아왔고 전일빌딩 옥상과 상층을 향해 사격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이곳저곳에서 헬기가 날아오고 총성이 빗발쳐 어떤 종류의 헬기인지, 전일빌딩을 향해 몇 분간 쏘는지, 다른 곳은 쏘는지 제대로 볼 틈이 없었다”면서 “다만 분명한 것은 계엄군 헬기가 1~2분 이상 전일빌딩을 난사했다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시민군은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최후의 항쟁을 다짐했고 도청 건물과 이웃한 전일빌딩의 옥상과 상층부에도 시민군 다수가 배치돼 있었다고 박씨는 전했다.

최근 국립과학사연구원이 헬기 사격 탄흔이라고 분석한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흔적과 관련해선 “27일 새벽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시민군 입장에서 도청을 사수하려고 전일빌딩 옥상에 시민군을 여럿 배치했는데, 당시 계엄군 헬기가 전일빌딩 옥상과 상층부를 집중사격하는 과정에서 탄흔이 남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씨는 특히 계엄군이 도청 진입작전을 벌일 당시 헬기를 앞세워 고층 건물을 집중사격하면서 지상에선 계엄군을 도청으로 이동시켰을 것이라 해석도 내놨다.

5·18 당시 금남로와 전남도청 구간 고층 건물에 배치됐는지 모를 시민군 사격에 대해 헬기가 공중에서 화력을 지원하며 엄호한 뒤 공수부대가 지상작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일빌



5일 전일빌딩 관계자가 계엄군 헬기 사격 탄흔이 새겨진 건물 10층 천정 텍스를 가리키고 있다. 국립과학사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정 결과를 통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10층 건물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

딩 헬기 사격 탄흔(국과수 감정결과)과 카톨릭센터 탄흔(전주교 증언), 광주은행 옛 본점 고층 유리창 탄흔(국과수 감정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박씨 설명이다. 박씨는 “최근 전일빌딩 10층 천정 부근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가 의뢰를 하면, 탄환을 찾아내 헬기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탄에 의한 것으로 판명났다. 카톨릭센터 6층도 헬기 사격관련 증언이 나왔다”면서 “전일빌딩 상층부에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던 것은 당시 시민군의 응사가 있어서 집중 사격이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와 관련 정수만 5·18 민주유공자 유

족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닌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가 현장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다면 이는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군당국은 이제라도 헬기 기총소사 전모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전일빌딩 탄환 발굴 오늘 국과수에 요청 방침

### 국과수 “옛 광주은행 본점 탄흔 1점은 소총탄”

5·18 당시 파손된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에 대해 국립과학사연구원(국과수)이 “총탄에 의한 탄흔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내었다. 국과수는 제시된 증거물(유리창 3점)만으로는 탄환 종류 및 발사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M 60 등 기관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광주은행 옛 본점 유리창 3장에 남은 탄흔 4개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광주은행 옛 본점 사육 유리창에 남은 탄흔에 대해 “구경 5.56mm의 소총탄에 의한 탄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관총 사격 가능성은 작게 봤고, 제시된 증거물 등으로는 발사

위치(각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었다.

M60 기관총에서 발사된 탄환이라면 한 유리창에 다수의 탄흔이 동시에 생성될 것이나 제시된 유리창에는 1~2개의 탄흔이 산발적으로 생성됐으며, 유리창 3장 중 1장은 상향 사격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상향 하향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탄흔이 남은 광주은행 옛 본점 사육 유리창 3장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1980년 5월 금남로 3가에 자리했던 광주은행 옛 본점은 최근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으로 드러난 총탄 흔적 100여점

이 발견된 전일빌딩과는 직선거리로 300여m 떨어져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르면 6일 국과수에 전일빌딩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탄환을 찾고 탄흔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과수는 지난달 발표한 감정서에서 “(전일빌딩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사격 탄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면서 “150여개 탄흔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 10층 천정 부근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가 의뢰를 하면, 탄환을 찾아내 헬기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지적 재조사 비리’ 무안군청 또 압수수색

### 군수 친형 수뢰 혐의 구속

무안군청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군수 친형이 구속된데 이어 군청이 한 달 여만에 2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무안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무안군청 종합민원실과 6급 공무원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지적 재조사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 측량과 경계 설정 등 지적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안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

석해 금품수사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에는 연안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으로 무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군이 발주한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차 뇌물취득)로 무안군수의 친형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는 군수 친형 구속 후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전일빌딩 헬기사진 삭제한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 “5·18 왜곡 끝까지 투쟁할 것”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부실·왜곡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5월의 진실을 삭제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는 5·18 당시 전일빌딩 위 헬기 사진이 삭제됐다”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례 중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사진을 선택해야 한다

는 기본적 상식에 따라 해당 사진은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전남도청 학살을 시민수습 대책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결렬로 인한 불가피한 일로 왜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오월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이 모인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정치 비상대책회의’도 5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도 안된 불량교과서,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학교로 보낼 수 없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회고교과서 폐기 운동은 지난 3일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에 대해서만 653개의 오류가 발견됐으며 부실한 국정교과서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리기가 음주 교통사고...대리운전보험 적용 안돼

광주 도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고객 차량을 몰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술을 마시고 집에 안전하게 가려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는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경. 장소는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오거리 단컨도너츠 부근이다. 차주 박모(36)씨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대리운전기사 백모(47)씨가 전대병원 오거리 한 상점 앞을 달리다 전대병원과 충돌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뜻밖이었다. 대리운전기사 백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리운

전기사 백씨는 추가 조사 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형사처벌(내지 행정처벌)과 별개로 차주 박씨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에 사고를 냈다면 통상 대리운전보험으로 사고가 뒤처리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대리기사가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면 대리운전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결국 차주 박씨가 대리운전기사 또는 그가 속한 대리운전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수리하거나, 차량을 수리한 후 운전사 보험사 측이 대리운전기사(회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young@

##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연기

### AI 확산 우려에 4월말로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로 잠정 연기됐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축제를 주관하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10일부터 사흘간 열 예정이었던 축제를 4월 말로 연기했다.

고싸움놀이 축제 연기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관계부처 대책 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최근 주춤해진 AI가 확산세로 돌아설 것을 우려해 지역별 정밀대포팀맞이 민속축제와 세시 풍속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보존회는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축제를 정월대보름에 맞춰 답답태우고, 고싸움놀이 시연, 풍등날리기 등 시민참여행사로 치를 예정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도심 폐사 비둘기

### AI 음성 판정...감염 안돼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된 비둘기 7마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둘기 폐사가 독극물 먹이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 북구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비둘기 7마리 사체에 대해 AI 감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임동의 한 도로에서 죽은 비둘기 7마리가 발견되자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비둘기 집단폐사는 드문 경우로, 일부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비둘기들이 폐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검사결과 AI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비둘기-인체감염’이라는 염려에서 벗어났다.

비둘기들이 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폐사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둘기 사체가 발견된 인근에서는 많은 양의 수상한 새 먹이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먹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사연구원에 독극물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감식해 달라고 의뢰해둔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때 밀어 모은 돈 들고 된 동료 물미

○~설을 쇠려고 동료가 목욕탕 옷장에 차곡차곡 모아 뒀던 돈봉지를 들고 달아난 20대 목욕관리사가 범행 사흘만에 경찰에 달미.

○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목욕관리사 이모(27)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30분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목욕탕 남자탈의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모(49)씨가 옷장에 보관해둔 현금 200만원을 들고 종적을 감췄다는 것.

○이씨는 “요 며칠 같이 일했던 동생이 마스터 카를 이용해 내 옷장을 열고 돈만 챙겨 간 것 같다”는 한시 진술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씨는 “고형지터 목욕탕 일거리가 나서 옮겨가려했는데 집값도 마땅찮고 설을 쇠야 하는데 돈도 충분치 않아 손을 댔다, 서둘러 반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3539	1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921-3 182㎡ 등 921-3 79.3㎡ 지시와 창고 등 48.6㎡ [채시외건물포함]	대 농가주택	21,688,500	21,688,500	말괄매각, 목책2및 지시외건물일부만 점지상세소재
2016타경 3218	1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875-2 2047㎡ [임정지외경계불명확측량등에의거경계확인요]	대	14,943,100	14,943,1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3478	1	완도군 신지면 신리 859-1 337㎡ [매각대상 이난타인소유권소재허여법정지상권설정여지있음]	대	31,318,000	31,318,000	말괄매각
	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신67 7503㎡ [임정지외지번780/12844전부, 지번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임야	3,247,820	3,247,820	임야부담도구역지속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3522	1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221-1 1475㎡ 등 1221-1 140㎡ 지시와 지문창고16.5㎡ [채시외건물포함]	창고용지	40,389,000	40,389,000	말괄매각, 채시외 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별매각조건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기대수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허하며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기 필요한 경우 해당시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 공유지가 인사청해법 제140조에 의한 유선매수신고된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외되는 경우 그 공여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결정일까지 매수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초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3. 매각기일 : 2017. 2. 20. [월] 10:00
4. 매각결정기일 : 2017. 2. 27. [월] 14:00
5.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6.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당첨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만원]에 해당하는 공행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좌를 채굴한 현서[월액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대수고인으로 통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기대수고인과 차순위매수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입찰한 대금지급기한지 매각대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계약기일을 지정된 후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매각대금)을 지양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다시 계약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양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세와 지양권세 납부한 후 등기세영수필증서 및 등기세영수필증서 사본을 첨부하고, 국민수탁재판장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유자 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매각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물권인접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할 지장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지장권설정등기를 매수인에게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일반인등의 출생에 채권자가 위하여 매각기일 이후에 건당 매각결정 금액, 원상복구금, 위 등기비용, 촉탁비용 및 등기비용을 법원이 신청과에 비추어 결정해 주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명함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④ 입찰당첨료 내오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청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 등록취득자격증명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고인으로 통고한 후 매각결정일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다. 단, 농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날이면,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법원 게시판과 공고나 판부에 비추어 매각결정서를 발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3자가 자문을 변경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결과 공고의 유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판공공고 -> 법원공고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법원판례의 열람 가능한 정보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사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상이하다 하고, 대법원판례에 상이하다 할 경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이한 판결은 법원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3차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서를 발송 취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